

Goal 9

회복(복원) 가능한 인프라 건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및 혁신 촉진

김대환 · 김병은

I. 목표(Goal)의 의미

1. 설정 배경

지난 15년 간 국제사회의 개발의제가 되었던 MDGs와 비교했을 때 올해 말 새롭게 출범할 SDGs 중에서 가장 큰 변화를 엿볼 수 있는 부분 중 하나는 경제성장을 지향하는 목표 9번이라고 할 수 있다.¹⁾ 물론 경제성장을 목표(end)로서가 아니라 빈곤퇴치를 위한 수단(means)으로 한다는 전제는 있지만 이러한 변화는 여전히 MDGs 체제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접근이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지난 MDGs가 인간개발 이슈에 치중한 나머지 개발의 구조적 요인과 경제성장 측면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컸기 때문이다.²⁾ 사실 개발의제에서 경제성장이라는 주제가 배제된 것은 상식적인 관점에서나 혹은 한국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과 인도 등의 개발경험에 비추어 볼 때에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MDGs에서는 왜 ‘성장’이라는 단어조차 찾을 수 없었고 또 반대로 SDGs 논의에서는 왜 ‘성장’이라는 이슈가 다시 대두되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 MDGs는 ‘개발’의 측정지표로서 GDP의 한계를 체계적으로 지적한 Sen의 ‘역량이론(capability approach)’에 기초하여 보건과 교육 등 인간개발 이슈에 크게 중점을 두었다. 즉 개발의 목적은 단순한 소득증가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이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에서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보건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김종일 외 2011). UNDP가 개발한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이런 흐름도 곧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빈곤퇴치의 수단으로서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도외시한 점은 MDGs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비판이 이어져 왔다. 한 예로 ODI는 다수의 저소득국가에서 전문가그룹을 중심으로 빈곤퇴치를 위한 성장전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고 있다고 보고했다(Shepherd 2008). 이러한 논의와 함께 국제사회가 국제개발협력에서 성장 이슈를 본격적으로 제시한 것은 2010년 서울정상회의에서 도출한 ‘G20 개발의제’이다. G20 개발의제는 MDGs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저소득국의 빈곤퇴치가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하며 복원력 있는 ‘성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제개발협력을 경제성장에 집중한다는 개발원칙을 세운 바 있다. 그러면서 G20은 저소득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필요한 9개 분야를 선정하였는데, 이는 각각 인프라 투자, 인적자원개발, 무역, 민간투자자 고용창출, 식량안보, 복원력 있는

1) 김지현(2015)은 17대 SDGs를 6대 필수요소로 분류하면서 목표 8, 9, 12를 번영(prosperity)에 포함하였다.

2) UN Open Working Group(2012) p.2 표1 MDGs의 강점과 약점 참조.

성장(사회보호체제 강화 등), 금융소외계층 포용, 국내재원 동원, 개발경험 및 지식공유 등이다. MDGs의 중점방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최근의 변화는 주류경제학에서 산업정책 이론의 부활이다. 기존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워싱턴 컨센서스’로 대변되는 구조개혁 프로그램은 그 실망스러운 성과로 인해 한계를 드러냈고 이 과정에서 개도국 경제발전의 구조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소홀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부상한 ‘구조전환 중심의 경제발전론’은 세계은행에서도 ‘새로운 구조경제학’이라고 명명할 정도로 주류경제학의 핵심으로 편입되었다. 이는 개도국에 대한 개발협력에 있어서도 그 중요성이 커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임소영 외 2012).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SDGs에서는 17개의 목표 중 9번째 목표로 ‘복원력 있는 인프라 건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및 혁신 촉진’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정의와 의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 목표는 빈곤퇴치를 위한 수단으로서 성장 지향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인프라 건설과 산업화, 과학기술혁신을 제시하고 있다.

1) 인프라 건설

인프라에 대한 범위를 규정할 수 있는 통일된 견해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통상 사회간접자본(SOC)이라고 지칭된다. 이중 전력, 수자원 등의 여타 인프라는 다른 목표에서 다루게 되므로 본 보고서는 동 목표에서 실제 세부목표의 타깃으로 삼고 있는 교통과 통신 인프라에 대한 논의로 한정하고자 한다.

UN의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인프라는 빈곤을 해소하고 MDGs를 달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는 연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개발에 중점을 둔 지난 MDGs에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UNGA 2014). MDGs에서는 수자원 분야에 해당하는 ‘물과 위생’에 대한 목표가 명시적으로 제시된 바 있고, MDG 8번에서는 개발 과정에서 기술혜택을 확대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ICT를 강조하였지만 국제사회의 ODA를 통한 집중적인 자원 투입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인프라도 인간개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한적인 범위에서 다뤄진 것으로 보이며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활동의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의 효과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교통 인프라와 이동성(mobility) 이슈는 MDGs에서 사실상 누락되었다.

맥킨지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2013~2030년 중 전 세계 인프라 개발에는 총 57조 달러(연간 3.2조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며 분야별로는 운송(41.5%)과 전력(21.3%)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다(Dobbs et al, 2013). 반면 인프라 개발자금의 공급은 양자, 다자 개발기금의 경우 2004~2013년 중 연 평균 236억 달러에 불과하여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임호열 외 2015). 최근 중국이 주도하여 출범을 준비 중인 아시아 인프라 개발은행(AIIB)은 ADB 등 기존 다자개발은행들이 재원의 한계 및 자원배분 우선순위로 인해 개도국의 많은 인프라 수요를 적절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잘 보여준다. 때문에 ADB와 AIIB 간 상충논란이 있었지만 중점지원국가 및 분야로 보완적인 순기능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크다.

2) 산업화

앞서 동 목표의 설정배경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Post-2015 개발의제에서 산업화가 대두된 배경에는 구조변화 중심의 경제발전론이 새로운 조류가 된 데 기인한다. 산업화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산업화란 가장 좁은 의미로는 농업 중심의 경제에서 제조업 중심의 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근대화’라고 불리는 일반적인 과정과 더욱 관계가 있다. 예를 들면, 농업의 근대화는 토양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해충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며, 트랙터와 콤팩트와 같은 농기계뿐만 아니라 고도의 다생산 종자를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 시기에 산업화가 중요해진 이유는 20세기 후반 동아시아의 추격성장이 산업화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생산구조가 산업중심으로 재편되었고 세계 산업생산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격하게 상승했음을 뜻한다. 임소영 외(2012)는 일본, 한국, 대만, 브라질, 멕시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데이터 비교가 가능한 10개국을 선별하여 제조업 일인당 생산성 수준을 비교한 결과, 성공적 경제추격은 생산성, 특히 제조업 생산성의 추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선진국을 막론하고 경제발전이 언제나 구조변화를 동반한다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을 보인다.

개도국에 대한 산업화 지원의 필요성은 최빈국이 가장 집중되어 있는 아프리카의 현실을 보면 더욱 절실히 느낄 수 있다. UNIDO의 2011년 국제산업통계연감에 따르면, 아프리카 대륙이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 정도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아프리카의 인구가 세계 인구의 14.8%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세계 인구의 8.4%를 차지하면서 제조업 부가가치는 5.7%를 점유하고 있는 중남미와 비교하면 아프리카의 열악한 산업 기반을 더욱 실감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실정이 아프리카가 산업화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해온 결과라는 점이다(주동주 외 2011). 이런 측면에서 성공적인 산업화를

이뤄낸 우리나라의 개발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개도국, 특히 최빈국의 산업화를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과학기술혁신 촉진

앞서 살펴본 산업화와 마찬가지로 개도국의 혁신역량은 선진국과 비교해서 크게 뒤쳐져 있다. 아래 〈박스 9.1〉은 혁신역량을 대변하는 연구개발(이하 R&D) 투자와 연구인력 수 등 여러 지표에서 이러한 격차를 잘 보여준다.

〈박스 9.1〉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혁신역량 격차 현황

- 북미지역은 GDP의 2.7%를 R&D에 투자한 반면 아프리카는 0.4%
- 전 세계 연구인력 중에서 여성의 비중은 27%에 불과
- 전 세계 연구인력 중에서 0.5%만이 최빈국에 거주(EU 20.1%, 북미 21.9%)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깨끗한 물과 위생을 달성하는 목표만을 위해서도 250만 명의 엔지니어와 기술자가 필요
- 선진국 국민 중 인터넷 사용자는 74%인 반면 개도국은 26%에 불과

출처: UN Open Working Group(2014:114) 박스 재인용

과학기술혁신(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이하 STI) 정책은 그 특성상 독립적인 주제로 접근하기도 하지만 광범위한 개발의제에서 여러 다른 정책에 통합되는 범분야(cross-cutting) 주제로서의 접근이 더 강조되고 있다. 때문에 교육, 보건, 식량안보, 환경 및 기후변화, 에너지, 재해경감 등의 주제에서도 STI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SDGs 초안에서는 목표 9번 외에 17번 이행수단 목표에서도 기술을 중요 이행수단 중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과학기술이 선진국들만 향유할 수 있는 발전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개도국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이자 수단이라는 방향으로 국제사회의 인식이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II. 목표(Goal)별 분석

1. 목표의 논리구조

동 목표는 기본적으로 인프라, 산업화, 혁신이라는 세 주제를 포괄하면서 이들이 SDGs 비전에 부합하도록 사회적 포용성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를 담아 총 8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다(아래 〈표 9.1〉 참조).

먼저 인프라 부문과 관련해서는 3개의 세부목표가 제시되었다. ‘세부목표 9.1’은 역내 인프라

〈표 9.1〉 ‘목표 9. 인프라, 산업화 및 혁신 촉진’ 세부내용

목표	세부목표	내용
인프라와 산업화	9.1 인프라	저렴하고 공평한 접근성에 주안점을 두고 경제발전과 인류의 웰빙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및 접경 인프라를 포함하는 양질의, 믿을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있는 인프라 개발
	9.2 산업화	국내적 상황에 맞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촉진 및 2030년까지 고용과 국내총생산(GDP)에서 산업부문의 점유율 확대(최빈국은 점유율을 2배로 향상)
	9.3 소기업 등 기업활동 지원	개도국에서 소기업과 기타 기업들의 대출 등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시키고 이들의 가치사슬 및 시장으로 편입 증대
	9.4 자원이용 효율성, 친환경기술	2030년까지 모든 국가들이 개별적 역량에 맞춰 자원 활용 효율성 증대와 청정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과 산업 프로세스의 적극적인 적용을 통한 인프라 업그레이드와 산업 변화 정책이행
	9.5 연구 및 기술역량	2030년까지 혁신을 장려하고 인구 백만 명 당 R&D 연구 인력을 x% 증원, 민간 및 공공 R&D 지출을 증대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과학기술 연구 강화 및 산업부문 기술역량 업그레이드
	9.a 인프라	아프리카 국가, 최빈국(LDCs), 내륙개도국(LLDCs) 및 군소도서국(SIDS)에 대한 금융, 기술 및 기술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에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있는 인프라 발전 실현
	9.b 연구 & 개발	산업다각화 및 상품의 부가가치화 등 적절한 정책 환경 조성 등 개발도상국에서 국내 기술 개발, 연구 및 혁신 지원
	9.c 정보통신기술	2020년까지 최빈국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 향상과 인터넷에 대한 일반적, 적절한 접근을 위한 노력

출처: 저자 작성

라와 국경 간 인프라를 포함하여 모두에게 공평하게 접근 가능한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인프라개발을 제시하였다. 둘째로, 지식사회가 도래하면서 ICT가 중요한 인프라로 대두된 것을 반영하여 ‘세부목표 9.c’에서는 인터넷 등 ICT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최빈국(LDCs), 내륙개도국(LLDCs), 군소도서국(SIDS) 등 특수한 상황에 처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별도의 ‘세부목표 9.a’를 추가했다. 인프라가 포함하는 범위는 훨씬 더 넓지만 수자원, 전력 등은 타 목표에서 다루지게 되므로 여기에서는 운송 인프라와 ICT 인프라만을 세부목표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화 부문에서는 ‘세부목표 9.2’를 통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촉진하고 제조업으로 대표되는 산업 부문이 차지하는 GDP와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늘리도록 했다. 특히 최빈국에 대해서는 산업 부문의 비중을 두 배로 늘리는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제시된 세부목표 9.3에서는 소기업과 기타 기업들의 금융접근성 향상, 그리고 가치사슬과 시장으로의 편입 등을 제시함으로써 고용 창출과 빈곤 퇴치라는 중소기업들의 순기능을 부각시켜 산업발전의 포용성(inclusiveness)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

한편, 인프라의 개발과 산업의 발전이 기술의 수요처로서 기술개발을 촉진시킴과 혁신역량이 다시 생산역량으로 이어지는 밀접한 관계를 고려하여 과학기술혁신 부문이 목표 9번에 함께 포함되었으며, 관련한 세부목표 9.5에서는 R&D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지출 증대와 R&D 인력 양성을 통해 산업 분야의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과학연구를 증대시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산업과의 보다 직접적인 연계를 강조한 세부목표 9.b는 산업다각화와 상품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여 국내기술의 개발, 연구 및 혁신을 반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산업화와 인프라 개발,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과학기술혁신 활동들은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자원의 투입이 요구된다. 그간 전 세계 대규모 인프라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환경적 피해를 볼 때에도 이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데, 이런 고려들을 반영하여 ‘세부목표 9.4’는 인프라와 산업에 있어서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청정·친환경 기술과 산업공정 도입을 확산시키는 체제로 전환토록 제시했다. 이 세부목표를 포함하면서 성장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균형을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2. 개발협력의 관점에서 본 목표체계 분석

현재 제시된 SDGs의 목표는 2014년 8월 발표된 이후 변동이 없는 상황이지만 UN은 지난 5월 SDGs 전문가회의 준비 과정에서 그간 세부목표별로 제시되었던 복수 후보지표들을 세부목표 당 한 개의 우선순위 후보지표로 좁혀가고 있다. 각 세부목표들과 이번에 도출한 지표들이 2015년 9월 UN 총회까지 그대로 유지될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지난 5월 UN 통계국이 발표한 시점을 기준하여 SDGs의 세부목표와 지표들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우선 세부목표의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UN이 제시한 8개의 세부목표를 ① 인프라 부문, ② 산업화 부문, ③ 과학기술혁신 부문, ④ 환경지속가능성 부문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재구성하였다.

〈표 9.2〉 4개 영역으로 재구성 ‘목표 9번’의 ‘8개 세부목표’

① 인프라 부문	② 산업화 부문	③ 과학기술혁신 부문
9.1 지역 및 인프라개발 9.a 아프리카, 최빈국, 내륙개도국 및 군소도서국 인프라 개발 9.c ICT 인프라 접근 향상 ³⁾	9.2 고용과 GDP의 산업부문 비중 확대 9.3 소기업과 기타 기업의 금융접근성 및 시장 편입	9.5 R&D 지출 및 인력확대 등 기술역량 강화 9.b 기술개발, 연구, 혁신 통한 산업고도화
④ 환경적 지속가능성		
[9.4] 자원효율성 향상 및 친환경 기술 확대 적용토록 인프라와 산업 재편		

출처: 저자 작성

1) 인프라 부문

9.1 저렴하고 공평한 접근성에 주안점을 두고 경제발전과 인류의 웰빙을 지원하기 위 한 지역 및
접경 인프라를 포함하는 양질의, 믿을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있는 인프라 개발

• 지표 : 4계절 이용 가능한 도로에서 2km 이내 거주하는 농촌인구의 비중

9.a 아프리카 국가, 최빈국(LDCs), 내륙개도국(LLDCs) 및 군소도서국(SIDS)에 대한 금융, 기술, 및
기술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에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있는 인프라 발전 실현

• 지표 : GDP 대비 R&D 지출(%)

9.c 2020년까지 ICT에 대한 접근 향상과 최빈국에서 인터넷에 대한 보편적, 적정가격에 가능한 접
근을 위한 노력

• 지표 : 기술단계(2G, 3G)별 모바일 네트워크 이용인구(%)

앞서 목표의 정의 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프라의 범위는 교통, 전력에너지, 수자원, 통신 등 그 범위가 넓지만 세부목표 9.1은 운송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반적으로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인프라를 개발하는 동안 고용과 기술이전의 기회가 발생하고 인프라가 개발된 이후에는 교육, 보건, 치안, 경제 등 모든 분야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물과 물건의 이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거나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간 교역 및 해외 수출 등 국내외 경제교류가 활성화되고 지역 주민들의 소득창출로 개인의 복지가 증진되거나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인프라의 다양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세부목표 9.1’에서는 인프라에 모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대규모 인프라 개발사업들이 실제로 빈곤계층까지는 혜택이 잘 돌아가지 않거나 이들의 이해관계를 가장 후순위로 반영함으로써 불평등을 심화한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UN 전문가그룹(Inter-Agency and Expert Group, IAEG)은 지난 3월까지 여러 후보지표들이 있었지만 결국 ‘4계절 이용 가능한 도로에서 2km 이내 거주하는 농촌인구’를 새로운 우선순위 후보지표로 제시했다(UNSD 2015).

한편, 아프리카, 최빈국, 내륙개도국, 군소도서국은 특별한 관심을 필요로 한다. 대부분의 내륙국들은 동시에 최빈국이며, 최빈국과 내륙국의 절반 이상이 아프리카에 위치한다. ‘세

3) ICT는 그 특성상 통신인프라 영역과 과학기술혁신 영역에 공히 포함된다. 여기서 ICT를 인프라 부문으로 분류한 것은 세부목표 9.c가 ICT 보급률을 다루고 있어 혁신역량을 산업화와 연계하고자 하는 과학기술혁신 부문의 타 세부목표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부목표 9.a'는 이 국가들의 열악한 사정을 고려하여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통해 인프라 개발을 유도하고자 한다. 하지만 UN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국제적인 가용 데이터를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GDP 대비 R&D 지출 비율(%)을 대체지표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 지표는 세부목표 9.a와 관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지표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이 세부목표는 당위적 측면에서 그 지원 필요성은 매우 높지만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프라 개발은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도국 정부예산, ODA 뿐만 아니라 민간재원의 투입이 절실하다. 그렇지만 이들 국가에 대한 투자위험을 완화해주는 수단과 함께 민간투자자 입장에서 수익성 있는(bankable) 프로젝트의 발굴이 잘 작동하지 않을 경우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을 보인다.

‘세부목표 9.c’는 ICT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하면서 모바일 네트워크 이용자 수를 지표로 제시했다. MDGs에서도 세부목표(target) 8.f에서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특히 ICT의 혜택이 모두에게 가능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기 때문에 동 세부목표는 MDGs를 계승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박스 9.1>에서 본 바와 같이 개도국의 인터넷 이용인구는 선진국의 1/3에 지나지 않는 수준으로 ICT의 잠재력이 아직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는 평가다. 특히 ICT의 잠재력은 최근 두 가지 측면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과학기술 등 지식에 대한 공개적 접근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가 간 또는 국가 내 계층 간 지식격차를 줄일 수 있고 모바일 기술들은 새로운 포용적 혁신(inclusive innovation)을 가능하게 한다.

2) 산업화 부문

9.2 국내적 상황에 맞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촉진 및 2030년까지 고용과 국내총생산(GDP)에서 산업부문의 점유율 확대(최빈국은 점유율을 2배로 향상)

- 지표 : GDP 대비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

9.3 소규모, 기타 산업의 대출금 상환기금 등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 향상과 value chain 및 시장으로의 통합

- 지표 : 전체 산업에서 소기업의 부가가치 비중(%)

‘세부목표 9.2’는 구조변화 중심의 경제발전론⁴⁾에 기초하여 산업화 촉진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한다. UN 공개작업반은 경제성장이 궁극의 목표(end)가 아닌 빈곤퇴치를

4) 임소영 외 (2013)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워싱턴 컨센서스 개혁 패키지가 지배하면서 산업정책을 일종의 터부로 취급하였으나 이에 기초한 구조개혁 프로그램(SAP)들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구조전환 중심의 산업정책이 부활하였다고 설명한다.

위한 수단(means)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빈곤 퇴치라는 근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성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배경은 앞서 설명한 바 있다.

후보지표로는 제조업의 부가가치, 즉 산업화를 대표하는 제조업 부문의 생산액(output)을 GDP 대비 비중(%)으로 표현한 지표가 제시되었다. 여기서 부가가치는 어떤 기업이 그 생산액을 그 기업이 전부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원재료, 부품 등 다른 기업의 생산물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체 생산액(output)에서 중간 투입물들을 제외한 값이며,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지 않는 순부가가치(net value added)를 의미한다. 이 지표를 통해 산업고도화 과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3월에 함께 제시되었던 후보지표에는 총 고용에서 제조업 부문의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있었는데 세부목표에서 산업부문에서의 ‘고용’ 비율을 높이겠다고 제시한 점을 감안했을 때 현재와 같이 세부목표 한 개당 한 지표만을 제시하도록 했을 경우 지표의 단순화로 인한 공백은 어느 정도 생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 부문은 전체 고용의 15~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이 창출하는 직접고용은 1인당 소득수준과는 반대관계를 갖는다. 즉, 최빈국과 같이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일수록 농업에서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이동하면서 상대적으로 많은 고용의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노동자들이 농업에서 고부가가치 생산부문으로 이동할 경우 임금, 기술(skill), 노동조건, 여성고용기회 등이 함께 개선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도 선진국과 성공적인 산업화를 이룬 국가들을 보면 산업화로 인한 구조전환과 임금상승이 많은 인구의 빈곤 해소에 기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UNGA 2014).

‘세부목표 9.3’은 국민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단기적으로는 고용을 창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으로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빈곤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 및 유지 효과는 대기업에 비해 우수함이 통계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이를 위한 지표로는 전체 산업에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생산액을 GDP 대비 비중(%)으로 나타낸 지표이다. 이 세부목표에서 강조된 금융지원은 중소기업 금융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대외신용도가 낮고 재무제표의 성과가 우수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신뢰성도 낮아 금융기관들은 대출을 회피하려고 한다. 특히 창업초기에는 투자비용에 비하여 수익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자금난에 봉착하여 도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들 기업이 안정화되면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수출에서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부문을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의 중요한 원천으로 인식하고 중소기업이 대기업 등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화의 사회적 포용성을 강조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3) 과학기술혁신 부문

9.5 2030년까지 혁신을 장려하고 인구 백만 명 당 R&D 연구 인력을 x% 증원, 민간 및 공공 R&D 지출을 증대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과학기술 연구 강화 및 산업부문 기술역량 업그레이드

• 지표 : GDP 대비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9.b 산업 다각화 및 상품의 부가가치화 등 적절한 정책 환경 조성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에서 국내 기술 개발, 연구 및 혁신 지원

• 지표 : 전체 부가가치 중 중 · 고급기술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

과학기술혁신 부문은 산업화 부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산업은 기술진보의 허브가 되는 역할을 하면서 기술개발과 혁신의 중요한 동력이 된다. 실증연구에서도 제조업은 현재까지 R&D 투자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부문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투자는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지게 되는데 동일한 산업부문에서의 생산성 증대를 넘어서 타 산업부문의 생산성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하면서 전체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개도국들의 혁신역량(Innovation Capacity)이 크게 강화될 필요가 있다.

‘세부목표 9.5’는 국가의 혁신역량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인 R&D 지출금액과 R&D 인력 수를 늘려 산업 분야에 필요한 기술역량을 강화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세부목표의 측정지표를 한 개로 정하는 과정에서는 몇 가지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R&D 인력에 대한 글로벌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불완전하다는 단점이 있고 R&D 지출규모는 성과지표라기 보다는 투입지표라는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R&D 지출의 효과성을 가정할 경우 국제 비교를 위한 지표로서는 ‘R&D 지출’ 지표가 더 대표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UN이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이 검토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쪽을 최종 지표로 하든 공여기관 입장에서는 여전히 두 지표가 중요한 모니터링 지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산업과 기술, 경제성장 간의 관계와 더불어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사실은 구조전환과 폭넓은 생산역량이 세계경제의 주기성(cyclicality)과 변동성(volatility)에 대응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세계경제가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고 있으며, 수출과 수입시장에서의 급속한 변화, 그리고 국제금융의 흐름이 변화하는 데서 기인하는 국가경제에 대한 충격을 이겨내야 한다. 이 시대의 금융시장은 이전 어느 때보다 불안정하다고 할 수 있는데 개도국들은 산업 다각화를 통해 경제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런 실정을 반영하여 ‘세부목표 9.b’는 산업 다각화와 상품의 부가가치화를 위한 핵심요건으로서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개도국들이 국내의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 및

혁신을 지원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산업의 경쟁력과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전략이지만, 기업 등 민간부문의 개발, 기업 내 혁신문화의 확산, 산학연 간의 연계시스템 등 혁신생태계(innovation ecosystem)가 제대로 작동했을 때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세부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단위에서 추구하는 목표와의 논리체계가 잘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환경지속가능성 부문

9.4 2030년까지 자원이용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청정·친환경기술 및 산업공정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하도록 인프라 업그레이드 및 산업 개편

• 지표 : 자원생산성(Resource Productivity)

‘세부목표 9.4’는 지금까지 언급한 인프라, 산업화, 과학기술혁신 등 성장 지향적인 활동들이 많은 자원의 투입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성장과 환경 간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우리에게는 더 친숙한 개념인 저탄소 녹색성장⁵⁾과 같은 맥락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는 ‘자원생산성’이 제시되었는데 자원생산성은 GDP를 국내재료소비(Domestic Material Consumption, DMC)로 나눈 값이다.

그간 인프라 및 산업화 정책은 경제발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프라와 산업시설 위주의 건설 및 확장 등 공급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환경보호 및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맞이하여 산업활동과 인프라개발에 있어서도 저비용·고효율 전략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세부목표라고 할 수 있다.

3. 목표체계 평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9번 목표에서는 인프라, 산업화, 과학기술혁신 등 세 주제를 포괄하고 있다. 이들은 경제성장을 위해 긴요한 핵심영역들로 하나의 목표 내에서 함께 다루면서 통합적인 접근이 가능케 하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각 세부주제가 갖는 중요성에 비해 17대 목표 중 하나로서 다뤄지지 않고 그 준위(level)가 모두 세부목표 수준으로 내려와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각 세부주제의 독립성과 중요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는 경제성장 또는 번영과 관련한 목표가 8, 9 12번으로 3개이긴 하지

5)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고, 이를 위해 자원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의미한다.

만, 이들 중 개도국의 자생적인 경제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생산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주된 수단은 결국 9번 목표(goal)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MDGs에 대한 비판의 결과로서 경제성장 이슈를 재조명한다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약한 측면이 있다.

현재 SDGs 17대 목표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MDGs에 비해 상대적으로 목표 간의 경계선이 분명치 않고 타 목표에 편입될 수 있는 일부 주제들이 새롭게 강조되면서 별개의 목표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인프라와 같은 주제는 ‘목표 6. 물과 위생’, ‘목표 11. 도시’, ‘목표 13. 기후변화 대응’ 등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인지 세부목표 9.1과 같은 경우는 인프라에 대한 목표이지만 ‘농촌인구에 대한 2km 이내의 도로 접근성’이라는, 그 범위가 보다 협소한 후보지표를 제시하면서 타 목표와의 중복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경우 해상 및 항공 교통 인프라에 대한 고려가 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또한 목표 9번이 결국 국가 전체적인 생산역량의 제고를 추가한다고 봤을 때 각 세부목표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지표로서의 논리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즉, 인프라 부문은 경제발전에 필요한 인프라의 확충 노력을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반드시 낙후지역에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는 것 뿐 아니라 기존 도로의 확장 또는 개선 등의 활동을 포함하게 된다. 이 역시 현재 제시된 9.1 후보지표로서는 모니터링하기 어렵다.

산업화에 대한 두 개 세부목표로 제시된 9.2와 9.3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고용창출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얘기하고 있다. 이는 산업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칫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부작용이 생겨나 실업률을 높이고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감안할 때 포용성(inclusiveness)에 대한 고려를 대체로 균형 있게 제시해주고 있다고 평가된다. UN이 지난 5월 제시한 우선순위 후보지표도 제조업과 소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라는 대표적인 성과지표를 제시하였으며 UNIDO의 검토에 따르면 데이터 확보에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과학기술혁신 부문의 세부목표와 지표는 여타 부문과 마찬가지로 단순명료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 부문에서 추구해야할 모든 면을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동 목표체계가 제한된 세부목표와 정량지표로 구성해야하는 불가피한 한계를 감안했을 때 각 세부목표는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고 해당분야에서 이미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대표적인 지표들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무난한 구성이라고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동 목표는 인프라와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각 부문별로 사회적 포용성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별도의 세부목표(9.4)를 제시함으로써 역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II. 우리의 대응 전략 및 기여방안

1.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및 대응방안

앞서 기술한 목표 9번의 설정배경과 의미, 그리고 세부목표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 ODA에 주는 시사점을 몇 가지로 도출해보고자 한다.

첫째로, 목표 9번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은 산업화를 통한 한국의 개발경험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비교우위 분야로서의 잠재력을 가진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난 정권 동안 성장위주의 개발정책을 수정하여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 발전 비전으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행동들을 실행해감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리더십을 평가받은 바 있다. 이러한 경험들은 성장을 추구하면서도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과도 잘 부합되므로 인프라와 산업화 분야 사업들을 Post-2015 체제에서 우리 ODA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가져가는데 큰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동 목표에서 제시한 3개 분야 중 현재까지 우리 ODA는 인프라 부문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면서 산업발전과 과학기술혁신 분야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는 정책방향의 전환도 검토가 필요하다.

〈표 9.3〉 2015년 ODA 분야별 배분 현황

구분	교통	교육	공공행정	수자원	에너지	보건	농림수산	기타
규모 (억원)	2,970	1,941	1,615	1,573	1,496	1,377	834	5,022
비중 (%)	17.7	11.5	9.6	9.3	8.9	8.2	5.0	29.8

출처: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5)

둘째로, 인프라, 산업화, 과학기술혁신(STI)이라는 경제 분야의 중요한 주제들이 한 목표 아래서 함께 제시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새로운 산업 정책 이론에서도 정책 간의 시너지를 강조하는 통합적 접근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는 우리 정부의 국별협력전략(CPS)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는 인프라, 산업화, STI, ICT 등이 각각 독립된 분야로만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년에 새로 수립할 CPS 2기 수립 시에는 수원국의 경제성장 전략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틀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CPS 수립에 참여하는 전문가 그룹에 경제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를 늘릴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앞서 세부목표와 지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단순명료성을 추구하거나 타 목표 내의 유사지표와의 중복성을 피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표지표들은 해당 세부목표를 적절히 대변하지 못하는 문제점들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한계점들을 우리 CPS 성과관리 체계(result framework)를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각 세부목표가 지향하는 본연의 취지를 잘 반영하여 보완적인 지표들을 일부 반영해갈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각 세부목표들이 명확한 정량지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ODA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성과중심관리(Result-based Management)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로, 인프라개발 등 경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의 투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ODA의 한정적인 예산으로 이런 투자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 민간재원을 레버리지하는 노력들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ODA가 최근 ODA 정의 현대화 움직임에 맞춰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에 좀 더 유연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 분야에서는 민간의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함께 검토해 나아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KOICA의 대응방안

앞서 <표 9.3>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우리나라 ODA 전체의 분야별 배분을 살펴봤을 때는 교통, 교육, 공공행정, 수자원, 에너지 등의 순으로 재원배분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EDCF 유상원조가 교통(36%), 수자원(19%), 에너지(9%) 등 경제 인프라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은 데서 기인하며, 무상원조의 2015년 분야별 배분을 보면 교육(13%), 공공행정(10%), 농림수산(9.9%), 보건(8.6%) 순으로 SDGs 목표에서 제시하는 인프라, 산업화, 과학기술에 해당하는 원조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⁶⁾

분야별로 시사점을 찾아보면, 인프라 부문은 무상원조 차원에서는 EDCF 유상원조, 다자개발은행(MDBs) 또는 민간투자자들이 개도국 인프라사업 투자를 위해 사전에 필요한 마스터플랜과 타당성조사 등을 개발컨설팅(DEEP)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본 사업으로 연계되는 비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다. 개도국의 인프라 개발 수요가 매우 높고 상기 언급한 여러 민관의 투자자들이 수익성 있는(bankable) 사업을 찾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KOICA는 실제 투자자들의 요구에 맞춘 유연하고 신속한 사업준비(project preparation)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최근 개도국 인프라투자

6) “1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2015. 관계부처 합동) p.5의 분야별 재원배분을 인용했다. 다만 산업정책, 과학기술정책 등의 개발컨설팅 분야 사업들은 각각 산업과 과학기술 분야이지만 공공행정 분야로 분류되어 지원되고 있음을 밝혀둔다.

를 촉진하고자 국제기구와 양자 공여국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민관파트너십(PPP)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둘째로, 산업발전 부문은 한국이 성공적인 개발경험을 갖추고 있음에도 그간 실질적인 컨설팅 사업이 KOICA 차원에서는 많이 이뤄지지 않았고 때문에 구체적인 전략이나 핵심 사업모델, 전문인력 풀 등의 사업추진 기반이 체계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실정이다. 금년 3월에 신설된 기술총괄팀은 종전에 녹색환경산업팀에서 겸하던 과학기술, 산업발전, 에너지 등을 새롭게 전담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산업발전과 과학기술 등에 대한 사업추진기반 마련의 첫 걸음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국내 정책연구기관, 분야별 집행기관 및 학계·산업계·연구계 등 전문인력들과의 네트워크와 사업추진 전략의 마련은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SDGs가 MDGs에서는 간과했던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특히 구체적인 전략으로 제시한 인프라, 산업화 및 과학기술혁신 등이 한국의 개발경험과 잘 조응한다는 측면에서는 반길 문제이지만 실제 원조를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집중해야 할 분야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즉, 산업발전과 과학기술혁신 등의 분야는 기존 사업추진 기반이 취약하여 원조인프라를 구축해가는 노력과 비용이 필요할 것이고 이 분야에 대한 비중을 늘리기 위해 기존에 집중했던 보건과 교육 분야 등에 대한 원조배분은 줄일 것인지에 대한 딜레마가 생긴다고 할 수 있다. 개발아젠다에 어떤 변화가 생기든지 원조효과성 또는 개발효과성을 추구하려는 노력과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원조집행의 필요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 2015. “1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김종일 · 윤미경, 2012. “산업분야 개발협력 방안: 개도국 산업역량 구축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종일 · 황원규 · 윤미경 · 김낙년, 2011. “G20 개발의제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지현, 2015. “Post-2015 개발의제 동향연구 2: Post-2015 의제에 관한 UN 사무총장 종합보고서 분석.” 개발과 이슈 21.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이재우, 2010. “Pro-Poor Growth와 경제 인프라 원조의 확대 필요성.” 『한국의 개발협력』. pp.43-55.
- 임소영 · 김계환 · 강지현 · 윤정현 · 민영진, 2012. “산업 분야 ODA의 동향과 이슈 분석.” 서울: 산업연구원.
- 임호열 · 문진영 · 이민영 · 이성희, 2015. “AIIB 추진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향.”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주동주 · 김계환 · 문종철 · 윤정현, 2011. “아프리카의 산업화와 한국의 협력: 나이지리아를 중심으로.” 서울: 산업연구원.
- 주동주 · 김세원 · 강인수 · 김종일 · 이시욱 · 윤정현, 2013. “한국의 산업분야 ODA 역량과 추진방안.” 서울: 산업연구원.
- Dobbs, Richard, Herbert Pohl, Diaan-Yi Lin, Jan Mischke, Nicklas Garemo, Jimmy Hexter, Stefan Matzinger, Robert Palter, and Rushad Nanavatty. 2013. “Infrastructure productivity: How to save \$1 trillion a year.” McKinsey Global Institute. http://www.mckinsey.com/insights/engineering_construction/infrastructure_productivity, 검색일: 2015.06.30.
- Shepherd, Andrew. 2008. “Achieving the MDGs: The fundamentals.”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Briefing Paper 43. England & Wales: ODI.
-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First Proposed Priority Indicator List, <http://unstats.un.org/sdgs/2015/05/29/first-proposed-priority-indicator-list/>, 검색일 2015.07.03.
- UN General Assembly Open Working Group on SDGs. 2014. “Compendium of TST Issues Briefs.” New York: UN.

